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독일, 코로나 위기 속 가정폭력 방지 위해 상담 지원 강화¹⁾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로 독일 내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 라이프니츠경제조사연구소(RWT)와 뮌헨 공대(TUM) 연구팀이 18세에서 65세 사이 약 3,8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격리조치로 인해 가정에서 더 많은 신체폭력과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매체 ‘메르쿠어(Merkur.de)’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엄격한 격리조치 기간 구타와 같은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격리 기간 집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발생률은 더 높았다. 격리 기간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응답자 중 7.5%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0.5%는 아동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 여성에 대한 신체폭력 발생률은 8.4%, 아동에 대한 폭력은 9.8%였다.
-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파트너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였다. 이 경우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9.7%, 어린이에 대한 신체폭력 발생률은 14.3%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파트너의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에르푸르트 대학(Universität Erfurt)에서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상실로 인한 가정 내 더 많은 싸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놔다.
- 첫째, ‘청소년 긴급 지원 메일(JugendNotmail)’ 지원을 확대했다.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이메일이나 그룹 채팅(jugendnotmail.de) 등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이뤄지며, 심리학자와 사회교육자 등 150여 명의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긴급 지원 메일’은 우울증, 자해, 폭력, 따돌림, 학대 및 가족 문제 등 약 13가지 주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 상담 메일은 2001년부터 비영리협회 ‘jungundjetzt e.V.’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최대 1,00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두 번째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화(116111)와 부모를 위한 상담 전화(0800 111 0550), 이주 배경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www.jmd4you.de)을 총괄하는 ‘Nummer gegen Kummer’ 상담 서비스가 확장된다. 이 전화상담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및 관련 교육자들을 위해 독일에서 신속하게 상담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화상담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등은 익명으로 자신의 문제와 걱정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다. 독일 아동보호협회와 기타 지역복지기관과 연계된 이 상담 전화 서비스는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AG)이 지원한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격리조치가 엄격하게 시행 2020년 3월에는 ‘Nummer gegen Kummer’ 상담 건수가 2020년 2월에 비해 21% 증가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채팅 상담도 26% 증가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온라인 채팅과 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sofahopper.de’에 온라인 상담자와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라이브 채팅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담을 당분간 저녁 시간 이후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러 상담 기관에서도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임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동복지청과 독립 상담 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논의하기 위해 마인츠 사회교육학 연구소와 국제 교육 지원 협회, 힐데스하임(Hildesheim) 대학교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가족 상담에 관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설정 중이다. 이와 함께 보육원과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육자가 추가 교육을 받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NummergegenKummer (2020), <https://www.nummergegenkummer.de/> (접속일 : 2020.06.26.)
JugendNotmail (2020), <https://www.jugendnotmail.de/> (접속일 : 2020.06.2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0.03.31.), “Kinder und Jugendliche vor Missbrauch und Gewalt schütz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und-jugendliche-vor-missbrauch-und-gewalt-schuetzen/154288> (접속일: 2020.06.24.)
Merkur.de (2020.06.02.), “Studie: Mehr häusliche Gewalt in Quarantäne”, https://www.merkur.de/welt/studie-haeusliche-gewalt-in-quarantaene-und-finanzieller-not-zr-13784385.html?fbclid=IwAR3n3E1KJldT34PlYILP17-e1GT8_ts4jC6J3BLhuSfzXrcCYwl9PmXuq4 (접속일: 2020.06.24.)

독일, 코로나 위기 속 아동보너스 지급 및 종일학교 · 어린이집 확대 등 가족 · 돌봄 지원 강화

-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독일 정부의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족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비영리단체(공익단체) 지원’에 집중된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경제회복, 일자리 확보 등 독일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 마련 과정에서 가족과 아이돌봄이 지원의 핵심이며 가족 복지와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아동보너스(Kinderbonus) 지급

- 독일 정부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아동보너스 역시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된다. 다만 연 93,000유로(한화 약 1억 2,74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아동보너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아동에게 9월에 200유로, 10월에 100유로 총 300유로가 지급된다. 아동보너스를 받을 아동 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연방 정부는 아동보너스 지급을 위해 43억 유로(한화 약 5조 8,95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한번 지급되는 아동보너스와 달리 매달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월 204유로(약 26만 9천 원), 셋째 아이 월 210유로(약 27만 7천 원), 넷째 아이부터는 월 235유로(약 31만 4천 원)이다.
- 한편 아동보너스 지급과 함께 연방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종일학교(Ganztagsschulen)/호르트(Hort) 지원 확대

-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종일 학교(Ganztagsschulen)’와 ‘호르트(Hort)’ 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미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생의 돌봄 교육을 위해 특별기금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419억 원)를 편성한 바 있지만, 2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0년과 2021년 지원 비용을 받은 주정부는 프로그램 후반 즈음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엇보다 학교의 디지털 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학교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외에 집에서 가능한 이러닝(E-Learning)이 함께 이뤄지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및 학교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추가 지원

- 연방정부는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원)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709억 원)를 추가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뤄지는 보육시설 확장과 신축, 위생상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9만 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등을 통해 돌봄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비영리단체 및 기관 지원

- 비영리 단체 및 기관도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큰 위기에 닥친 사회적 기업, 유스호스텔, 청소년 교육 시설 외에도 비영리 아동 및 청소년 숙박 시설과 국제 청소년 교환학생 운영 기관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기관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특별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특히 독일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대출금으로 10억 유로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 최대 금액은 80만 유로(약 10억 9,676만 원)다. 그동안 비영리기관은 자금 및 수입 부족으로 대출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지원으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구조는 독일 사회 및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할 조치라고 발표했다.

• 참고문헌 •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 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접속일: 2020.07.14.)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Ministerin Giffey: Corona-Konjunkturpaket ist ein großer familienpolitischer Erfolg und richtig starker Impuls",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inisterin-giffey--corona-konjunkturpaket-ist-ein-grosser-familienpolitischer-erfolg-und-richtig-starker-impuls/156208>(접속일: 2020.07.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Corona-Konjunkturpaket enthält überlebenswichtige Kredit- und Überbrückungsprogramme für gemeinnützige Organisation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corona-konjunkturpaket-enthaelt-ueberlebenswichtige-kredit-und-ueberbrueckungsprogramme-fuer-gemeinnuetzige-organisationen/156250>(접속일: 2020.07.13.)

독일, 민간 및 공공 남녀동등 참여법 시행 이후 여성고위직 비율 소폭 증가

- 독일의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여성 이사진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 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 시행 이후 2017년에 기업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25%에서 32.5%로 증가했고, 올해는 35.2%로 증가했다.
-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30%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성 이사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독일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뉘는데, FüPoG 법안에 따른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 시행 이후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경영이사회'비율과 달리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7.7%에 그쳤다. 이는 약 80%의 기업에 여성 이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여성할당제 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상장기업의 약 70%가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 관련 성과를 0%로 보고했다.
- 독일 정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은 자발적으로 늘지 않으며, 할당제와 같이 강제조치만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

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성 고위직 할당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할당제 시행을 독일의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에는 경영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연방정부는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에 따라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이 높긴 하나, 여전히 주요 보직에 여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34%다.
- 고위직보다 조금 낮은 관리직 직군의 여성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1% 떨어졌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의 관리자 직군의 여성은 총 10,971명(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5%로 낮아졌다.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3%다.
-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정부 관련 감독위원회 구성에 보다 엄격한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련 일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이 전문 위원회 역시 2016년 1월부터 여성 할당제 30%를 시행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여성 할당 비율을 50%로 높였다. 현재 연방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540개가 있으며, 이 중 239개 위원회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3명 또는 4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은 현재 45.4%에 이른다.
-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매년 공공부문의 남녀 고위직 비율 실태를 파악하는 ‘독일 남녀 평등 지수(Gleichstellung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독일 연방 당국에는 14개 연방정부 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3.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Statistisches Bundesamt(2020), “Gleichstellungsindex 2019 –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 (접속일:2020.8.19.)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자료(2020.06.10.),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Freiwillig tut sich wenig – nur feste Vorgaben wirk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frauen-in-fuehrungspositionen---freiwillig-tut-sich-wenig---nur-feste-vorgaben-wirke> n/156474 (접속일:2020.08.19)

독일 여성, 대도시에서 여성대상 폭력에 대해 ‘불안’, ‘공포’ 시달리지만 정부 여성안전정책 부족

- 독일 대도시의 많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폭력을 경험하며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기구인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독일 지부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 안전’을 주제로 16세부터 71세 여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독일 대도시인 함부르크, 베를린, 쾰른, 뮌헨에서 여성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여성들은 인터랙티브 지도(Interactive Map)에 자신이 안전하거나 반대로 안전하지 않은 경험한 곳을 표시했고, 지도에 표시된 총 1,267개의 장소 중 80%가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지목됐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25%는 도시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0%가 거리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또는 위협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아 부정적인 곳으로 표시된 장소 중 25%의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예를 들어 여성들은 공원에서 조깅할 때, 길거리에서 언어 성폭력, 스토킹,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경험하면서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가로등이 어두운 거리 등 낮보다 밤에 더 큰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고 표기된 곳 중 80% 정도가 밤이나 어두울 때 느끼는 불안감이 컸으며, 낮에 위협을 느낀 장소는 20% 정도였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을 접했을 때,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이용할 때,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있을 때, 위험 상황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레스토랑이나 행사장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 플랜 인터내셔널은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인도 델리, 호주 시드니, 우간다 캄팔라, 페루 리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결과는 독일과 비슷했다. 대부분 소녀와 여성이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답했고, 총 21,000개 이상 장소에서 부정적으로 표기된 곳은 80% 이상이였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소녀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4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함께 ‘소녀를 위한 안전 도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이집트, 인도, 페루, 우간다, 호주, 스페인 등 12개국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마이케 로트거 플랜 인터내셔널 독일 지부 이사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소녀와 여성이 두려움 없이 도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통해 “길을 더 밝게 만들고 공원을 재구성하는 등의 도시계획조치도 필요하지만, 소년 및 소녀를 대상으로 성 역할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전히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괴롭히는 것이 괜찮다는 식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독일 정부의 눈에 띄는 여성안전정책은 없다. 다만 쾰른에서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웨이가드(WayGuard)’라는 휴대폰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앱 사용자는 자신이 신뢰할만한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를 등록해놓을 수 있고 집으로

귀가할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여주고 전화나 채팅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귀가한 이후에도 이들에게 귀가 여부를 알리게 되어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 사용자 또는 앱 사용자와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사용자가 긴급전화를 걸 수 있으며, 앱 중앙센터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이나 응급, 의료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웨이การ์ด' 중앙센터에서 바로 경찰 또는 병원에 연결한다. '웨이การ์ด' 앱은 AXA 보험회사 쾰른지사와 쾰른 경찰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앱은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의 앱 등록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는 스위스에서 서비스를 오픈했다. '웨이การ์ด' 앱 외에 쾰른시는 폭력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보호센터 두 곳과 긴급전화(0221/376490)를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Plan International(2020.08.12.), "Frauen erleben in ihren Städten Angst, Belästigung und Gewalt", <https://www.plan.de/news/detail/frauen-erleben-in-ihren-staedten-angst-belaestigung-und-gewalt.html> (접속일: 2020.08.21.)
- DW(2020.08.12.), "Women in Germany feel unsafe in large cities, study shows", <https://www.dw.com/en/women-in-germany-feel-unsafe-in-large-cities-study-shows/a-54541135> (접속일: 2020.08.21.)
- stadt koeln(2020), "Sicher nach Hause", <https://www.stadt-koeln.de/leben-in-koeln/soziales/gleichstellung/sicher-nach-hause?kontrast=schwarz> (접속일: 2020.08.23.)

영국, 코로나19로 올해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공개 유예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야기²⁾

- 영국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임금격차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2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정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당분간 유예하기로 해 코로나19 이후 영국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영국 고등교육 관련 통계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HESA(the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가 6월 1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초봉을 기준으로 대졸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남녀 임금 격차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2018년 대졸자 기준으로 남녀 평균 연봉은 2만 4천~2만 7천 파운드(한화 기준 3천 700만~4천 100만 원)이었다.
- 하지만 해당 연봉 구간별로 따져보면 고소득 구간에 포함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높았다. 취업 15개월 안에 연봉 3만 파운드(4천 600만 원) 이상 버는 여성 대졸자는 2018년 전체 대졸자의 18%인데 반해 남성 비율은 28%로 여성보다 10% 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연봉 3만 9천 파운드(6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구간에 포함된 남성은 2018년 전체 대졸자의 6%인데 반해 여성 비율은 3%로 남성보다 두 배 낮았다.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영국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공개정책도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춰 섰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정부가 법에 따른 제재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나 올해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 리즈 트러스 여성평등부 장관은 3월 24일 언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올해 성별임금격차 공개는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양성평등 활동가인 샬럿 우드워스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업의 법적 요구 조건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남녀평등 수준이 수십 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영국 국가세입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와 USL 교육연구소(UCL Institute of Education)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하는 엄마가 일하는 아빠보다 직장을 잃거나 퇴사할 가능성이 47%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서비스업과 소매업으로, 두 업종의 대부분 노동자가 여성이다. 해당 연구는 자녀가 있는 영국 3천 500가구를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평균 자녀 돌봄 노동 시간도 남성보다 2.3시간 더 많았다. 인터뷰에 참가한 여성들은 하루 평균 10.3시간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는 반면 남성들은 평균 8시간을 보냈다. 또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도 남성보다 1.7시간 더 많았다.

• 참고문헌 •

- The Guardian(2020.06.18.), “Gender pay gap begins for students straight after university – report”,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un/18/gender-pay-gap-begins-students-straight-after-university-graduate-data-report-uk>(접속일: 2020.06.09.)
- HESA(2020.06.18.), “Higher Education Graduate Outcomes Statistics: UK, 2017/18 – Salary and location of leavers in employment”, <https://www.hesa.ac.uk/news/18-06-2020/sb257-higher-education-graduate-outcomes-statistics/salary>(접속일: 2020.06.09.)
- Gov.UK(2020.03.24.), “Employers do not have to report gender pay gaps”, <https://www.gov.uk/government/news/employers-do-not-have-to-report-gender-pay-gaps> (접속일: 2020.06.09.)
- The Guardian(2020.05.29.), “COVID-19 crisis could set women back decades, experts fea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9/covid-19-crisis-could-set-women-back-dec>

ades-experts-fear(접속일: 2020.06.09.)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0.05.27.), "Parents, especially mothers, paying heavy price for lockdown",
<https://www.ifs.org.uk/publications/14861>(접속일: 2020.06.09.)

영국, 경제적 통제도 가정폭력으로 인정한 가정폭력법 하원 통과

- 2020년 7월 6일, 영국 하원은 신체적 폭력만 포함하는 전통적인 가정폭력의 정의를 넘어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통제까지 가정폭력으로 인정한 가정폭력 법안(Domestic Abuse Bill)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려면 앞으로 상원(House of Lords) 통과와 왕실 재가(Royal Assent) 절차가 남아 있다.
-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외에도 경제적 폭력(economic abuse), 강압과 통제, 교묘한 비신체적 폭력(manipulative non-physical abuse)까지 가정폭력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방안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법안은 지자체와 사법기관,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항을 감독하는 가정폭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금지, 가해자 행동 교정 훈련 등을 강제하는 가정폭력 보호 공고(Domestic Abuse Protection Notice)와 가정폭력 보호 명령(Domestic Abuse Protection Order)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한 안전한 쉼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신문 금지, 가정폭력 피의자 석방 조건으로 심리·생리검사(polygraph testing, 거짓말 탐지기) 실시 등 내용도 추가되었다.
- 영국 정부가 가정폭력법을 발의한 것은 가정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내무성이 2020년 3월 발간한 ‘가정폭력법안 주요 팩트시트(Domestic Abuse Bill 2020: Overarching factsheet)’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영국에서는 16~74세 연령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연간 240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3분의 2가 여성이다. 또한, 경찰에 신고된 범죄 10건 중 1건이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며 가정폭력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 내무성은 해당 보고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660억 파운드(한화 약 98조 3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민자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 민족을 돕는 단체 50곳과 이민자 인권 단체, 앰네스티 영국지부 등이 연합해 이끄는 캠페인인 ‘Step Up Migrant Women’은 영국 정부의 가정폭력법안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 가정폭력법안에 따르면,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석 달간 금전적 혜택을 포함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자 여성처럼 배우자 비자가 없거나 다른

종류 비자를 가진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

- 흑인과 소수 인종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Southall Black Sisters의 대표 프라그나 파텔은 2020년 7월 6일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이민자 여성이 배제된 이번 법안이 던진 메시지는 이민자 여성의 삶이 가치가 없고, 2등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 참고문헌 •

GOV.UK(2020.07.07.), “Domestic Abuse Bill passes House of Commons”, <https://homeofficemedia.blog.gov.uk/2020/07/07/7626/> (접속일 : 2020.07.15.)
 GOV.UK(2020.03.03.), “Domestic Abuse Bill 2020: overarching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 (접속일 : 2020.07.15.)
 The Guardian(2020.07.06.), “Migrant women deliberately left out of UK abuse bill, say campaign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ul/06/uk-government-accused-endangering-lives-migrant-women-domestic-abuse-bill> (접속일 : 2020.07.15.)

영국, 임신부 및 18개월 미만 유자녀 여성재소자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 정책 발표

- 영국 정부가 임신부 및 18개월 미만 아기와 함께 지내는 엄마 재소자 보호를 강화한다. 18개월 미만 아기와 엄마 재소자가 함께 지내는 교도소 내 특별 시설인 ‘Mother and Baby Units(MBU)’에 임신부 재소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신부×엄마 재소자를 돕는 상주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성 재소자를 위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20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신부와 엄마 재소자 전담 상주 전문가 배치, 임신부 재소자를 돌보는 교도관에게 추가 훈련 지원, 임신부와 엄마 재소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새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구성 등이 법무부가 공개한 정책에 포함됐다.
- 영국에서는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수감 기간 중 출산하면 아기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MSU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18개월 미만 아기가 있다면 아기를 교도소에 데려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엄마 재소자가 원한다고 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아기를 항상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 재소자가 아기의 교도소 입소를 신청하면 입소 위원회(admissions board)가 회의를 열어 아기가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하고, 해당 교도소의 MSU 여유 공간 등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 영국 정부가 임신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해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발생한 아기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여성 전용 교도소인 브론즈필드 교도소에서 임신부 재소자가 혼자 감방에서 출산하다가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 정부는 별도의 관심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임신부 재소자를 제대로 감독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지에 따르면,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성 전용 교도소로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557명을 수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일부 교도소를 민간 기업이 정부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는데,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소덱소 법무 서비스(Sodexo Justice Services)라는 영국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민영화된 교도소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 영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부와 교도소 내 출산 현황을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전수 조사해 공식 통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가 교도소 별로 별도로 저장돼 분리돼 있어 전국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도소 별로 흩어진 정보를 중앙 기관인 교정본부(Prison Service)가 한데 모아 필요 서비스를 예측하고, 임신부 및 엄마 재소자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 GOV.UK(2020.07.31.), "Prison Life",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접속일: 2020.08.25.)
- GOV.UK(2020.07.31.), "Review of operational policy on pregnancy mother and baby units and maternal separ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view-of-operational-policy-on-pregnancy-mother-and-baby-units-and-maternal-separation>(접속일: 2020.08.25.)
- The Guardian (2019.10.04.), "Baby dies in UK prison after inmate gives birth alone in cell",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접속일: 2020.08.25.)

캐나다,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제원조 예산 확대³⁾

-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9일 캐나다 국제개발부(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안전한 피임, 낙태 서비스에 접근한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제약받고 있다면서 캐나다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8,900,000(약 79억 원) 캐나다 달러의 국제원조 재원을 편성하여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safe abortions and reproductive

3)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health service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한다. 이 자금 가운데 490만 달러(약 43억 6천만 원)는 37개국에 피임과 낙태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인 마리 스톱스 인터네셔널(Marie Stopes International)에 배정될 것이며, 2백만 달러(약 7억 8천만 원)가 UN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기금(United Nations trust fund on violence against women to help combat gender-based violence)으로 지출될 것이다. 이밖에 이 재원은 안전한 낙태, 피임, 낙태 후 케어,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의료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외진 곳에서 고립되어 사는 소녀들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쓰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추가적으로 2백만 달러를 세계 각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옹호하고 피임법을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인 Ipas에 지원할 것이라 한다.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날 재원 편성의 목적을 밝히면서 “캐나다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도 여성의 재생산 성 건강과 권리(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의 증진에 여전히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재원 편성을 통해 증명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 한편 캐나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안전한 낙태 서비스 접근권, 산후조리와 다른 재생산권 문제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 건강과 권리 행동 캐나다(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 Rights)의 로라 네이다트(Laura Neidhart)는 국제원조 재원 발표와 관련한 매체와의 뉴스인터뷰에서 의약품과 피임 용품의 조달 및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클리닉들 또한 대거 휴업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와 세계 각지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권 옹호 활동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제약이 단순히 공중보건 때문이 아님을 지적했다. 미국에서 성 건강과 권리 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아이오와, 오하이오, 알칸자스, 루이지애나, 테네시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 삼아 다양한 수단으로 낙태를 금지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manipulating the crisis)”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이라는 핑계로 여성들에게 안전한 낙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이 여성들을 위협한 낙태 시술로 여성을 내모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네이다트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국에서도 트뤼도 행정부가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케어를 조망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밝혔다.
- 플랜 인터내셔널 캐나다(Plan International Canada)가 2020년 6월 공개한 보고서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난민 소녀들이 현재 삼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주(displacement),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위험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쟁지역, 고립지역,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 관련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사회서비스 자원이 세계 각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미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증폭되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편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제원조 정책에서 페미니스트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캐나다는 여성건강을 위한 국제원조에 1억 4천만 달러의 재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절반이 낙태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 관련 예산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하면 올해 발표한 8백 9십만 달러는 너무나 축소된 규모이다. 비판가들은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는 단순히 캐나다 정부가 이 분야에 관심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CTV News (2020.06.09.), "Feds commit \$8.9M in foreign aid fo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mid COVID-19", <https://www.ctvnews.ca/politics/feds-commit-8-9m-in-foreign-aid-for-reproductive-health-services-amid-covid-19-1.4976634> (접속일 : 2020.06.19.)
- Newswire (2020.06.19.), "Refugee girls face a triple crisis with COVID-19",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refugee-girls-face-a-triple-crisis-with-covid-19-860465828.html> (접속일: 2020.6.19.)
- Plan International Canada (2020.06.), "Close to Contagion: The Impacts of COVID-19 on displaced and refugee girls and young women", https://plancanada.ca/file/planv4_files/covid-19-refugees-2.pdf (접속일 : 2020.6.19.)

캐나다 아이돌봄 연구단(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어린이집의 코로나 대응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는 2020년 3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공공부문을 비롯한 상당수 직장들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거나, 학교 및 돌봄기관이 운영을 중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적돌봄 중단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돌봄기관들 역시 타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아이돌봄 연구단(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아이돌봄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6월 30일 공개하였다. 이 조사는 주정부 소관 기관들과 어린이집 연합 등 기관들이 지역의 아이돌봄 기관들을 섭외하여 5월 4일~5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아이돌봄 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4월 27일~5월 1일)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총 8,300개의 돌봄기관(어린이집 5,729개, 가정식 어린이집

(family child care homes) 2,571개)이 참여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캐나다 전역이 비슷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음을 드러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캐나다 전역에서 72%의 어린이집이, 39%의 가정식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나 그 비율은 주별로 상이했다. 노바스코시아주의 경우 100%에 가깝게 아이돌봄 기관들이 문을 닫았으나 알버타의 가정식 어린이집은 15%, 사스카툰의 어린이집들은 33%만이 해당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캐나다 전역에서 응답 기관의 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했으나 온타리오주 어린이집의 경우 72%가 오히려 운영시간을 늘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상 돌봄 체제를 운영하여 지정한 아이돌봄 기관들로 하여금 운영 시간을 늘리게 한 데서 기인한다.
- 코로나19 사태가 아동 돌봄기관에 미친 타격 또한 지역별로 상이했다. 2020년 5월 현재 응답한 어린이집의 64%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설을 다시 열 것이라고 답했으나 36%는 확실치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더 작은 가정식 어린이집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들의 68%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 54%는 정부 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덜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또한 지역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알버타의 경우 57%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거의 끊겼으나 퀘벡과 뉴브런즈윅, 사스카툰 등의 지역에서는 응답 기관들의 50% 정도가 평소와 다른없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응답한 어린이집의 71%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들을 임시 해고한 상태라 밝혔다. 응답 기관들의 29% 만이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4%는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급에서 직원들이 해고된 상태였다. 한편 이렇게 임시 해고된 아이돌봄 인력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격차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해고 인력의 87%와 64%가 각각 주정부의 캐나다 긴급 재난 지원금(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혜택을 신청했지만,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인력들의 경우 37%만이 이러한 재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상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돌봄 체계를 정상화함에 있어 아이돌봄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그리고 어린이집과 가정식 어린이집 모두 시설을 재개장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 즉,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줄어드는 원생 수를 공통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임대비 지원, 임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회복에 충분하다고 답한 어린이집은 4%에 그쳤고, 응답 기관의 55%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참고문헌 •

- Statistics Canada(2020.06.), "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s: Parenting During the Pandemic", <https://www150.statcan.gc.ca/n1/en/pub/11-627-m/11-627-m2020043-eng.pdf?st=8VE M8bMW> (접속일: 2020.7.20)
-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anadian Child Care Federation, Child care Now(2020.06.30.), "Canadian Child Care: Preliminary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Canadian-Child-Care-COVID19-Survey-Data-Report.pdf> (접속일: 2020.7.20.)
- ※ 상세 보고서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anadian Child Care Federation, Child care Now(2020.06.04.), "THE PANDEMIC EXPERIENCE HAS CREATED AN UNCERTAIN FUTURE FOR CANADIAN CHILD CARE SERVICES", 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The%20pandemic%20experience%20has%20created%20uncertain%20future%20for%20Canadian%20child%20care%20services_Highlight%20of%20a%20national%20survey_FINAL_CRRU.pdf (접속일: 2020.7.20.)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YWCA,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으로 돌봄경제의 회복 촉구해 정부 대응 주목

-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과의 국경은 봉쇄된 상태이지만 7월 마지막 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 비상사태 수위를 한 단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다시 열었고 식당과 커피숍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재영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캐나다 사회의 화두는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최근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젠더와 경제 연구소」와 캐나다 YWCA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회복이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결정적임을 강조하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는 캐나다의 성별 돌봄노동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 우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캐나다 여성들은 매일 남성들에 비해 평균 1.5시간 집안일을 더 해왔고 시골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이러한 무급 돌봄노동 성별격차는 더욱 심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최대 다섯 배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교육과 돌봄 기관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여성에게 지워지는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심화되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부모의 돌봄 노동 시간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돌봄의 의무를 남녀가 공평하게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가정, 홈스쿨링, 일터에서 삼중의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자,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간병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유색인종 여성(racialized women)의 경우 돌봄 의무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 배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돌봄 의무는 성별화되어있지만 동시에 이는 또한 인종화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시 해고 상태인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신속한 복귀가 힘들 것임을 지적하면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세대의 여성이 통째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가계지출을 억제, 경제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 해당 보고서는 국가의 생존과 안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에도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캐나다 사회가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저평가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관해온 오랜 관습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현재 캐나다 코로나19 사망 사례의 80% 이상이 노인 돌봄 시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돌봄 시설에 대한 국가의 열악한 지원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들 자신과 노인들 모두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심하게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퀘벡주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60%가 고질적인 저임금과 불안정적인 고용에 시달리는 파트타임 여성이며 몬트리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20%가 돌봄 종사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이민자 등으로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산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돌봄시설들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여부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가용한 캐나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영리 기관의 경우 비영리 돌봄 기관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60% 더 높고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45%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 이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주민,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드러냈으나, 코로나 사태 수습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영리 장기요양 기관 확대, 이를 통한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없이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회복 정책 수립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캐나다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해당 보고서는 돌봄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률 증대,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빈곤율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퀘벡에서는 아이돌봄에 경제에 1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주 정부에는 104달러의, 연방정부에는 43달러의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캐나다 정부는 OECD 권고안을 따라 최소한 GDP의 1%를 보편적인 비영리 데이케어 확대 등의 아이 돌봄에 투자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많은 아이 돌봄기관들, 특히 비영리 기관들이 문을 닫아 안 그래도 심각한 아이 돌봄 시설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소 25억 달러의 직접 정부 지원이 아이 돌봄 기관 신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재정이 전국의 아이돌봄 기관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이 과정을 감독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덧붙이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캐나다 경제 침체를 만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참고문헌 •

Toronto Star(2020.07.28.), "Boosting marginalized groups key to 'feminist economic recovery,' report says",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0/07/28/boosting-marginalized-groups-key-to-feminist-economic-recovery-report-says.html> (접속일: 2020.08.10.)

The Institute for Gender and the Economy at University of Toronto's Rotman School of Management & YWCA Canda(2020.07.28.), "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 Making the economy work for everyon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f0cd2090f50a31a91b37ff7/t/5f205a15b1b7191d12282bf5/1595955746613/Feminist+Economy+Recovery+Plan+for+Canada.pdf> (접속일: 2020.08.10.)

캐나다 여성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심화에 대응해 가정폭력 지원정책 다양화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해자의 감시망을 피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들은 내놓고 있다.
- 우선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WAGE)와 캐나다 여성재단(Canadian Women's Foundation)은 "도움의 신호 (Signal For Help)"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수신호를 홍보하고 있다. 가해자가 상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가정폭력 센터에 연락을 취하는 대신 지인과

의 영상통화나 공공장소에 노출된 상황에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되 엄지손가락을 주먹 안쪽으로 말아 쥐는 수신호를 취함으로써 구조 요청을 은밀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 수신호를 어디서든 보게 된다면 이는 구조 요청이므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 중이다.

- 한편, 오타와주에서는 오타와 여성에 대한 폭력 종결 연대(The Ottawa Coali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OCTEVAW)를 중심으로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쉼터 연결, 상담을 문자나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가능하게 하는 언세이프 엡 홈 오타와(Unsafe at Home Ottawa)라는 새로운 핫라인을 런칭하였다. 폭력 종결 연대에 의하면 오타와에서 기존 핫라인을 통한 구조 요청 건수는 코로나 비상사태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요 창구인 학교, 직장이나 데이케어 등이 문을 닫고 가해자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 중심의 기존 핫라인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오타와의 관련 시민단체들과 주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 사태와 폭력 사태 이중의 위기에서 고립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시 감시 상태에서도 접근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핫라인, 즉, 문자 기반의 서비스로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핫라인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언세이프 엡 홈 오타와의 상담 서비스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며, 안전하게 가해자와 지내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추천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세이프 엡 홈 오타와가 기존의 핫라인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이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열하더라도 신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와 채팅으로 나눈 대화 또한 암호화되어 오직 상담자만이 데이터에 추후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 언세이프 엡 홈 오타와는 원래 오타와 주정부 재정으로 오타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이 서비스가 공영방송에 보도된 후 오타와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가 다른 주에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폭력 종결 연대는 언세이프 엡 홈 오타와 핫라인이 현재 영어와 불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곧 다른 언어 상담도 가능하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LGBTQ2+)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 동안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에 대한 두 그룹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오타와 이주여성 서비스센터는 폭력 종결 연대와 함께 캐나다 사정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장벽까지 있는 이주여성과 난민 여성들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 "Signal For Help", <https://canadianwomen.org/signal-for-help/> (접속일: 2020.08.19.)
- Unsafe at Home(2020), <https://unsafeathomeottawa.ca> (접속일: 2020.08.19.)
- Kitchissippi Times(2020.08.05.). "Local text and online chat service supports women experiencing violence during COVID-19", <https://kitchissippi.com/2020/08/05/local-text-and-online-chat-service-supports-women-experiencing-violence-during-covid-19/> (접속일: 2020.08.19.)

스페인, 코로나19 이동제한에 따른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시민단체 중심 온라인 청원 시작⁴⁾

- 2020년 3월 14일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령 시행을 공포한 이후, 스페인 국민은 몇 달간 약국이나 마트와 같이 꼭 필요한 불일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 채 생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늘어난 가사·돌봄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6월 초, 2015년부터 스페인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및 일·가정 양립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인 Yo No Renuncio(I do not resign, 역: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이동제한령으로 가중된 여성들의 일·가정 부담 해소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7월 초 기준 해당 청원에 20여만 명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 본 단체는 이번 청원 배경으로 이동제한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스페인 정부가 가족 관련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약 4백만 이상의 가정에서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청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의무 때문에 기존에 하던 본인의 일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여성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전국에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지 2주 정도 되었을 시점인 3월 중순에 Yo No Renuncio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600여 명의 여성 중 응답자의 70% 가량이 집 안에서 재택근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80% 가량이 재택근무와 육아 또는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Yo No Renuncio 단체 설립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로라 바에나(Laura Baena)는 한 언론사를 통해 “코로나19,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실시된 이동제한령으로 우리는 곧 각자의 집안에 갇히게 됐다”면서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과 일·가정

4) 작성: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양립에 있어 진일보하려던 와중에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청원에서는 자택근무 보장 법제화,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불가피하게 부모 또는 양육자 모두가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 고용 비용 환급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 지난 4월,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제한령 기간 중 사람들이 육아, 일, 집안일이라는 일상을 어떻게 유지해나가고 있는지를 유머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시트콤 “Diarios de la cuarentena (Quarantine Diaries, 역: 격리생활 다이어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15명의 스페인 유명 배우들이 실제 본인 집에서 카메라로 스스로 촬영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작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육아일 분담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 온라인 강의를 챙기고 매일 해결할 집안일 등을 해내는 등 스트레스가 쌓이는 하루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실질적인 일상을 담아내 화제가 된 바 있다.
-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 21일, 3달여간 지속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발표했으나,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이번 청원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만 하다.

• 참고문헌 •

- Change.org(2020), “Exigimos medidas urgentes para conciliar y no renunciar #EstoNoEsConciliar,” https://www.change.org/p/pedro-s%C3%A1nchez-exigimos-medidas-urgentes-para-conciliar-y-no-renunciar-durante-esta-crisis-estonoconconciliar?source_location=discover_feed (접속일: 2020.07.09.)
- The Guardian(2020.05.29.), “‘We are losers in this crisis’: research finds lockdowns reinforcing gender inequality,”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may/29/we-are-losers-in-this-crisis-research-finds-lockdowns-reinforcing-gender-inequality> (접속일: 2020.07.09.)
- Reuters(2020.04.10.), “‘Quarantine Diaries’ sitcom makes fun of Spanish women’s coronavirus struggl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spain-sitcom-trfn/quarantine-diaries-sitcom-makes-fun-of-spanish-womens-coronavirus-struggles-idUSKCN21R33P> (접속일: 2020.07.09.)
- University of Valencia(2020.03.04.), “Las mujeres con menores que teletrabajan soportan la mayor parte del estrés del confinamiento,” <https://www.uv.es/uvweb/socials/es/novedades/mujeres-menores-teletrabajan-soportan-mayor-parte-del-estres-del-confinamiento-1285923210882/Novetat.html?id=1286127953796> (접속일: 2020.07.09.)

이탈리아 보건부, 경구용 임신중절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복용허용 기간 연장 및 입원 불필요 명시⁵⁾

- 2020년 8월 초, 이탈리아 보건부 로베르토 스페란자(Roberto Speranza) 장관은 경구

5) 작성: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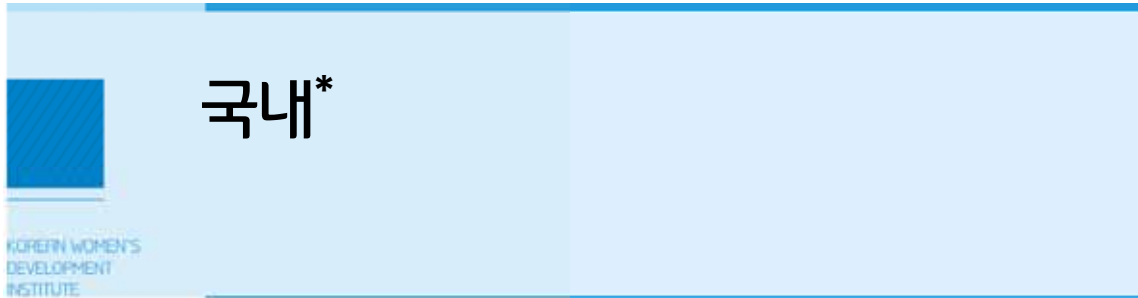
용 임신중절약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확산으로 외출 및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경구용 임신중절약 제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다 커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대거 투입되면서 병원들이 임신중절 시술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지했기 때문이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복용허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가톨릭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1978년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2009년에는 법적으로 임신 7주까지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을 허용했었다. 이번에 임신 9주까지로 그 복용 허용 기간을 다소 연장한 것이다. 실제로는 여성들이 임신 7주가 되기 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꼭 입원해서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처방 및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이탈리아 제도상으로는 임신 7주 이내에 병원에 3일간 입원해서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이탈리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약을 복용하여 임신중절을 한 경우는 18%정도에 그쳤다. 당일 시술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 20개 지역 중 5개 지역 정도에서만 외래환자 접수 및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단체 및 여성의 낙태 선택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기존 입원 절차를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임신중절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는 약 10명중 7명 정도의 이탈리아 내 산부인과 의사가 가톨릭 종교상의 신념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술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앞으로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외래환자로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약 30분 정도 병원에서 전반적인 상태를 검사받게 된다. 그리고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중절약을 받아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이탈리아 보건부 측은 약 10여년간의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입원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복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 인권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인 Human Rights Watch는 지난 5월부터 7월, 이탈리아 내 외과의사, 학계 전문가, 여성인권 운동가 등 17명, 그리고 임신중절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탈리아 보건부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 측은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임신중절을 거부하고, 여성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하고 심지어는 이웃국가로 원정 시술을 가야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 이번 경구용 임신중절약 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다. 한 보수단체는

여성의 낙태권 반대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이슈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발이 거센 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된 제도가 이행되면서, 앞으로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켜볼만 하다.

• 참고문헌 •

- AP(2020.08.08.), "Italy approves outpatient use for abortion pill", <https://apnews.com/60df27cd985e778cd25a16926546012d> (접속일: 2020.08.22.)
- Independent (2020.08.14.), "Italy approving outpatient use for the abortion pill is finally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women's rights",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italy-abortion-pill-women-rights-far-right-opposition-church-a9669506.html> (접속일: 2020.08.22.)
- Human Rights Watch(2020.07.30.), "Italy: Covid-19 Exacerbates Obstacles to Legal Abortion", <https://www.hrw.org/news/2020/07/30/italy-covid-19-exacerbates-obstacles-legal-abortion> (접속일: 2020.08.22.)



[여성가족부]

중고생 10명 중 1명,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성적 위험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랜덤채팅앱 내 대화분석,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경험 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된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전국 중고생(6,423명)의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은 11.1%, 만남 유인 피해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음
 - 성인남녀(2,300명)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는 88.5%로 2016년 83.9% 대비 4.6%p 증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1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7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확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중언어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 완화방안 강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9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 66.7%로 전년 대비 6.8%p 증가

- 여성가족부는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전체(2,148개)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 구성에서의 여성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율은 33.5%(전년 대비 1.4%p 증가),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은 1,395명으로 전년 대비 196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5.1%)으로 나타남
 - 남성 근로자는 40명당 1명이, 여성 근로자 293명당 1명이 임원이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4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돌봄체계,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 조성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관련 조사결과, 학교와 유치원 등 온라인 개학에 따른 돌봄 공백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취약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늘어난 가사와 돌봄을 주로 여성이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8

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①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③ 청년창업지원사업, ④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9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에 대한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현재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진 외출 자제나 이동 제한 조치들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이 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상담 증가 추이는 없지만 피해 및 상담·신고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요구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5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

-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4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긴급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장 등 공공기관 내 발생한 사건 관련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긴급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30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7월 28일(화)과 29일(수)에 서울시의 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43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역대 최고치 달성

- 여성가족부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힘.
 - 개별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비율 : 광역 84.6%, 기초 64.8%
 - 기초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 처음으로 40% 넘어서
 -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의 평균 : 광역('17)42.2% → ('19)44.9%, 기초('17)35.6% → ('19)40.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47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7개 시도 여성정책국장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응, 성차별적 조직문화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0

여성가족부,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 주제로 온라인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는 올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2

여성가족부,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여성가족부는 '19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대상의 여성 연령기준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②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③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④ 학군 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수령 가능

-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법령과 사업 등 총 29,395건을 대상으로 8,088건의 개선계획 수립
 - 법령 및 주요정책 총 3,373건 개선, 개선 이행률 전년 대비 12.1%p 상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 개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75

양성평등주간 9월 첫주로 변경

- 여성가족부는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19.11.26), 올해부터 양성평등주간을 종전 7월에서 9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힘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20.5.19. 개정, 20.11.20. 시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0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예산(1조 1,191억 원) 대비 5.3%(598억 원) 증가한 1조 1,789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7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국제회의 첫 출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이틀간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를 주제로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 이번 포럼은 올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관련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앞으로 정례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8

공무원·공공기관·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18~22) 계획(17.11월 수립)의

2020년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2020년도 목표 조기 달성
-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기관 최초 여성 기관장 임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과 홍보물의 성차별 요소 점검

-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고용노동부 홍보물의 성차별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6.3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5

고용노동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를 개최해 성희롱, 성차별 없애기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공유 등 조직 내 성평등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 마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9

일·생활 균형 위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 (50.1%)에 도입

- 고용노동부는 2020년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라고 설명하며,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2.]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33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위해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 연말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6.]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3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7.]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50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예술인특고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단계적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경력 단절 방지 위한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제고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2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95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1,081명) 대비 34.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년)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남성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 증가 등 제도 활성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밝힘.
 -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7,784명,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8.13.]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274

위라벨일자리장려금, 코로나19대응 긴급자녀돌봄에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발표되면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위라벨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324

[보건복지부]

학대 위기아동 발굴 및 재학대 발견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과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6.24.]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5124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운영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진행
 - 코로나19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결혼·임신을 미루고 저출산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청년에 대한 고용 충격, 돌봄의 어려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끊임없는 경쟁에 몰린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 강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5338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실시하고,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가기로 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2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5478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2차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한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돌봄의 위기’와 혁신적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23.]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5556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대책 강화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힘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53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함
 -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 체계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6.]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66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
 -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9208

[법무부]

최근 범죄인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치

- 법무부는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내린 ‘인도불허’ 결정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다고 밝힘. [법무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I3NjA2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12cmZzRW5kZGVtdHllM0QIMjZpc1ZpZXdnZ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12c3JjaFdyZCUzRCUyNg%3D%3D>

[교육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논의

- 교육부 등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에 총력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 책무성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20.07.29.]

• 참고문헌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37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s=moe&m=020402&opType=N>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함

-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 체계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6.]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6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07.]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44>

국가인권위원회, 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과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적 책무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15.]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73>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를 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및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08.]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4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 주요내용 >		
	현행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시안)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확대
급여체계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50% 지원 ▶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	▶ 6개월까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계단식 방식으로 재설계 ▶ 소득 기준으로 급여 책정
사용방식	▶ 육아휴직기간 총 1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재원	▶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계정 (일반회계 일부 전입)	▶ 실업급여계정과 분리 별도 회계 구성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일부 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17.]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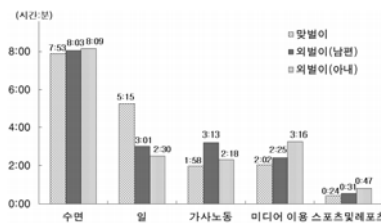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09>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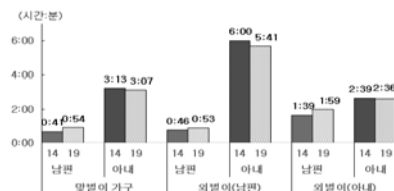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은 성인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등 주요 생활활동 시간을 비교 수록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가사노동 시간은 맞벌이/외벌이 가구 모두 5년 전보다 남편은 증가, 아내는 감소했으나, 아내 외벌이 가구의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3분 감소하는데 그침

<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의 주요 행동 시간사용 >



< 가사노동시간 >



[통계청 보도자료, 2020.07.30.]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4161&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